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2008년 2월

## 안전 농식품 생산·유통체계 구축, 시장개방 확대 대비 연구 26개 기본연구과제 설계세미나 개최



우리 연구원은 올해 추진되는 26개 기본연구과제의 설계세미나를 2월 20일부터 시작했다.

연구원은 2월 20일 중회의실에서 황윤재 전문연구원의 '농산물 감모 및 폐기통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시작으로 올해 26개의 기본연구과제 설계세미나를 갖고 있다.

### 활력 있는 농촌개발과 사회안전망 구축

올해 연구사업의 목표를 '소비자의 안전 농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한 농정체계 전환 연구, 활력 있는 농촌만들기를 위한 지역개발 및 사회안전망 연구'에 두었다. 또한 농정 연구의 품질제고, 농정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지원을 위한 각종 관련 사업 및 지원 사업의 추진도 올해 연구사업의 목표이다. 우리 연구원은 '찾아가는 연구' 수행으로 농업·농촌의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우수한 연구성과물 생산과 확산을 통해 농정 개발 및 수립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연구의 기본 방향을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한 생산 및 유통 체계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부문 구조개선과 인

재육성 연구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농정 전환 연구 △농촌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 연구 △농촌의 구성원 다양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26개의 기본연구과제를 선정하였다.

###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

기본연구과제 선정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제와 정책 수립 및 향후 정책과제 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실증 기초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정부나 농업인단체로부터 연구수요가 높은 과제 중에서 수탁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적은 과제를 선정했다. 연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설계세미나, 결과세미나 등에 토론자로 참여 시키고, 부서별 중간보고를 강화해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수행하는 기본연구과제명은 다음과 같다.

△농산물 감모 및 폐기통계 구축을 위한 연구

- △산지유통조직의 성공요인 분석
- △전업농의 위험관리 방안 연구
- △농촌지역 통계 DB 구축을 위한 연구
- △국토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한 농촌 중심지 발전방안
- △중국 지역농업 구조와 주산지 변동 연구
-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부문 보상체계 개선방안
- △자포니카 쌀의 국제수급 전망 연구
- △동아시아 FTA 대비 농업부문 연구(2/2차연도)
- △친환경 농자재산업의 발전방안
- △우리 농산물의 수출시장 분석과 대응 방안
- △목재의 수급 전망 연구
- △신규 취농의 진입장벽 해소 방안
-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농지제도 개편 방안(1/2차연도)
- △선진국형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2/2차연도)
- △특수가축의 생산·유통실태 연구 - 오리, 꿀벌, 산양, 사슴을 중심으로
- △UR 이후 농업부문 시장개방 영향분석
-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및 유통실태 조사연구
- △살기좋은 농촌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편 방안(2/2차연도)
- △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방향
-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개선 방안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과 대응전략(1/2차연도)
- △농산물 우수브랜드 육성방안
- △농업부문 전망모형 구축 연구(2/2차연도)
- △외국산 청과물의 수입 및 유통체계 연구
- △농산물 안전관리제도의 적용실태와 개선방안

## 월례조회, 박경철 원장 초청 '행복한 동행' 강의



2월 월례조회에서 박경철 원장이 '행복한 동행'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연구원은 2월 1일 대회의실에서 월례 조회를 가졌다. 최정섭 원장은 2월 1일자로 새가족이 된 식구를 소개하며, 1월에 열린 전망대회와 연구원 평가서 작성을 위해 수고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최 원장은 2월부터 시작되는 연구설계세미나와 업무 보고를 성실하게 준비하여 연구와 각종 업무가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더불어 농업 발전에 기여한 박성재 선임연구위원에게 대통령상을 전달했다.

안동에서 신세계병원을 운영하는 박경철 원장이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및 직장인의 재테크'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였다. 박 원장은 안동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경험한 일화를 소개하며 '있음과 없음'을 주요 내용으로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길 당부했다. 또한 재테크 강의에서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라 말하며, "부의 축적이 목적이 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돈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의했다.

### 신입직원 7명 교육 실시

연구원은 2월 1일자로 채용된 김광선, 채광석, 한재환 전문연구원과 권인혜, 김동훈, 승준호, 윤행현 초청연구원 등 7명을 대상으로 신입직원의 조직과 업무 이해 및 기본소양 교육, 농촌현장 방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2월 4일 지원부서의 각종 업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원장과의 대화 시간도 가졌다. 2월 11일에는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하여 시간과 정보 경영,

문제해결 능력 함양을 위한 강의를 들었다. 또한 2월 12일에는 이천도 드림양돈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진길부 조합장에게 선진양돈경영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이날 오후에는 우리 연구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제천 보례마을을 방문, 농업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명암 선촌체험마을에서 1박을 했다. 2월 13일에는 평창대관령원예농협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듣고 한우시험장을 방문한 뒤, 양평 생생농장과 개군 한우 '하누家' 사업장을 방문·시찰했다.

### '식품정책연구단' 설치·운영 식품정책연구 전담 수행

우리 연구원은 농업관련 산업에서 식품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어서고 농림부가 식품업무를 전담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식품정책연구를 전담할 「식품정책연구단」을 최근 발족하였다.

식품정책연구단은 현재 연구과제 단위로 분산되어 활동하고 있는 식품관련 연

구 인력을 통합하여 식품산업 연구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고, 관련 기관의 정책지원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신설되었다. 또한 자체 연구 수행·발표 및 정부 담당자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식품정책연구를 이끌어 가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식품정책연구단은 식품산업별 시장구조 분석, 식품 소비 및 영양 분석, 식품산업 및 안전관리 정책 분석, 식품산업의 산업연관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정책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식품관련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온라인 포럼도 개설하여 식품정책 관련 정보를 교류할 계획이다.

식품정책연구단은 단장에 최지현 선임연구위원, 간사에 김성훈 전문연구위원, 단원에 이계임 연구위원, 김철민 부연구위원, 황운재 전문연구위원, 한재환 전문연구위원, 한혜성 연구위원, 주현정 초청연구위원으로 구성되었다.

### 개원 30주년 기념 주요 행사 일정

주요 행사명	개최예정일
농업전망 2008 발표대회	1. 23
중국사무소 개소식	3. 6
개원 30주년 기념 행사 및 학술대회	4. 1
OECD 공동 학술세미나	4. 3
동아시아 농업논단	5월 예정
FANEA 공동세미나	6. 3
IATRC 공동 학술세미나	6.30~7.1
세계농촌사회학대회	7.6~7.11

## 산림청, 서강대 경제학부와 연구협력협정 체결



우리 연구원은 2월 27일 산림청과 연구협력협정 체결식을 가졌다.

최정섭 원장은 2월 22일 프라자호텔에서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남성일 학장, 2월 27일에는 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산림청 서승진 청장과 연구협력협정(MOU)을 각각 체결했다.

서강대 경제학부와 MOU를 체결함으로써 우리 연구원은 경제적 분석 방법론과 정책개발 및 자문과 관련된 공동연구, 연구과제의 공동수행, 소속 인력 및 연구정보의 공유, 국제세미나 공동 개최, 우수 학생에게 인턴기회 제공과 위탁교육 등의 협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산림청과 MOU를 체결하여 양 기관은 산림정책 개발 및 관련 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인력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고, 산림정책 연구비 지원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 새 정부 농정에 바란다

김 정 호 부원장

2월 25일에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였다.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듯이 농정 부문에서는 기존의 농업·농촌정책에 더해 식품정책을 중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조직 개편이 진통을 겪기도 했으나 '농림수산식품부'로 귀착된 것은 더욱 반가운 일이다.

## 위기 극복에 대한 인식 공유

오늘날 농림수산업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 2000년 이후 농림수산 국내총생산(GDP)은 명목액으로 정체 내지 감소하는 추세이며, 산업 비중도 2006년에는 3.2% 수준으로 위축되었다. 식품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대부분의 농산물이 과잉기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농업교역 조건이 악화되어 도농간 소득격차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전업농과 기업형 농업법인의 성장은 농업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기도 하지만, 영세농 계층과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농촌사회의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경영주는 고령화되는데 후계자는 부족하고, 기초생활보장이 안되어 은퇴를 못하는 고령농어가 늘어나 농어촌 사회를 궁핍하게 하고 있다.

농림수산업을 둘러싼 대외적 여건도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 및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선진국 수준의 시장개방을 예고하고 있으며, 연초부터 재개된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도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때보다는 개방이 훨씬 가속화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게다가 WTO 체제는 국제규범에 따라 정부의 시장 개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농정의 국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농림수산업·농산어촌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새로운 패

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은 농정개혁의 지속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 농산업의 외연을 확대해야

새 정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농림수산업의 외연을 확대하여 활력을 되살려야 하며, 그 핵심이 식품산업 육성이다. 오늘날 농업은 1차 산업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시장개방 진전에 따라 원료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소득 증대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 결과 전업농들도 생산에 만족하지 않고 가공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려 애쓰고 있다. 식품가공산업을 창업하는 농업법인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농업과 식품산업을 연계하여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는 농업인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식품안전관리 업무도 농정의 중요한 영역이다. 식품정책의 목표는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것이며, 세계농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는 국내 농업의 생존전략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체계를 확장하여 농수산식품에 대해서도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전과정의 안전성을 농수산식품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농산물의 국내시장이 거의 포화상태에 와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수출시장이 확장되고 있으며, 중국도 고급 농산물의 수출시장으로 잠재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수출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작은 정부'는 정책의 수혜자인 농어민이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첫째, 소비자·도시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품목과 품질의 농림수산물(식품)을 생산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농산어촌의 깨끗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를 창출하여 새로운 소득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

둘째, 정부 주도에서 시장지향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제논리에 따라 생산·유통·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부는 시장조성과 시장실패 보완을 담당하며, 농림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작황이나 시황과 같은 관측 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향이다.

셋째, 생산 중심에서 탈피하여 다원적 기능을 중시해야 한다. 농림수산 분야 전반적으로 증산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또, 개별농가에 대한 투융자 지원이나 생산과 가격 조절정책에서 탈피하고, 농림수산업이 지닌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토대로 농어가소득과 직결되는 직접지불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넷째,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마케팅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수확 후 관리기술 혁신으로 품질을 고급화하며, 대형 소매유통업의 확산 등 소비자유통 변화에 부응하여 균일한 품질의 농림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브랜드파워를 높일 수 있는 산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농산어촌을 산업과 생활의 복합공간으로 개발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농산어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편리하면서도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을 정비하고 생활기초시설을 확충하여 농어민과 도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국토공간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R**

# 한·EU FTA 6차 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 전략

어 명 근 선임연구위원

한·EU FTA 제6차 협상이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작년 5월 협상을 시작한 이래 8개월간 여섯 차례의 협상을 진행한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양허, 즉 관세 인하계획과 자동차 기술표준 분야는 논의되지 않았다.

## EU,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수용

상품양허 분야가 제외된 표면적인 이유는 EU가 우리 측에 최소한 한·미 FTA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민감품목의 예외적 조치라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진 상품양허보다는 다른 분야의 협상을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EU측이 IBM사에 의뢰한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SIA)' 결과에 따라 대응하려는 전략이다. 또한 동시에 한·EU FTA 협상 출범의 기폭제가 되었던 한·미 FTA가 양국 의회의 비준 등의 압력으로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어 협상 초기와 달리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6차 협상에서는 무역구제 분야에서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도입하기로 합의하는 성과가 있었다. EU는 우리 측이 제안한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항을 수정 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합의하였다.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적용대상 품목의 수입물량이 사전에 정한 수준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관세를 높이는 보호장치로서 피해조사 등 별도의 사전절차없이 발동할 수 있다. 다만,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 물량과 발동 세율 등 구체적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양허협상 과정에서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양측은 WTO 농업협정의 특별긴급관세(SSG)와 수입부과금(mark-up) 등 WTO 협정

상 제도는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위생·검역(SPS) 분야는 지난 5차 협상에서 대부분 합의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역화 인정 절차와 육류 수출작업장 승인 절차를 주로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EU측이 5차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제시한 통합협정문에 우리 의견을 추가한 재수정안을 통보하였다. 지역화 인정 절차가 EU의 수정안과 비슷한 입장이므로 조만간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육류 수출작업장 문제는 EU가 지나치게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한 데 대응하여 수입국의 권리 확보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 신선 농산물 원산지 기준 잠정 합의


농산물 원산지 기준은 신선 농산물(HS 1류부터 14류까지)의 경우 자국내에서 재배 또는 사육한 것만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EU에 대한 가공 농산물 수출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공 농산물(HS 15류부터 24류까지)의 경우 제3국산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원산지로 인정하자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공 농산물 원산지 문제는 EU의 입장이 통일되지 않아 3월 초로 예정된 다음 임시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공산품을 포함한 원산지 협상의 전체 타결은 기술적 검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적재산권 분야 전반에 걸쳐 협상에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지리적 표시(GI) 분야는 보호대상 품목의 범위에 관한 논의에서만 다소 진전이 있었다. 양측은 일반 농식품의 경우 각기 상대국에 지리적 표시 보호를 요청하는 품목요약서를 제공하고, 검토 결과 문제가 없으면 각자 해당 법규에 따라 등록한 후 보호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EU가 보호 신청한 농

식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주류는 '주세법'의 등록 및 보호방식을 각각 적용하게 된다. 다만, 포도주와 증류주는 EU의 보호품목 수가 우리에게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 보호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 협상 최종단계 전략 수립 필요

이번 협상에는 중요한 쟁점 분야인 상품양허와 자동차 기술 표준 분야가 포함되지 않아 괄목할만한 성과는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품 양허 이외의 분야에서는 대체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많은 분야가 협상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농업 분야는 EU측이 IBM사의 SIA 보고서가 나오는 2월 이후 최종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 SIA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의 FTA 체결이 EU의 경제, 사회는 물론 환경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우리 측 양허안을 대폭 수용하는 입장으로 선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일 부정적 결과가 예상될 경우 오히려 한·미 FTA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양허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농업분야도 조만간 EU측이 관심품목을 제시하면 생산자 단체 및 품목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우리 측의 최종 입장을 검토하는 등 최종 단계의 전략을 미리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EU측 요구의 핵심인 한·미 FTA 수준의 양허라는 점을 감안하여 양허 제의 품목과 관세 부분 인하 품목,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간 양허품목 등으로 세분된 우리 측의 최종적인 양허안을 준비해야 할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등 반대급부에 대해 업계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일본, 농업의 6차산업화로 농촌활성화

김 태 곤 연구위원

시장개방의 급류 속에서 영세한 농가들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농산물 가격하락에 의해 생산축소와 소득감소의 과정을 겪고 있는 일본 농업에서 6차산업화가 등장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이다.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어 농촌지역에서 고용창출과 소득확보를 통하여 지역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6차산업화란 농업의 생산, 가공, 서비스의 융합

농업의 6차산업화란 농업이라는 1차산업을 출발점으로 하여 농산물 가공(2차산업)과 직판장이나 음식점, 숙박업, 관광업 등(3차산업)을 농촌지역에서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은 종래 생산측면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 때문에 2차 산업의 식품가공은 식품제조업의 영역으로, 또 3차산업의 농식품 유통, 농업·농촌관련 정보 및 서비스, 관광 등도 도시의 도소매업, 정보산업, 관광산업의 영역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 결과 농업에서 파생하는 부가가치와 고용기회가 공업이나 도시로 이전되어 농업 성장은 정체 내지는 축소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식품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농업소득이나 농촌고용과 무관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6차산업화의 개념이다. 농업의 생산, 가공, 서비스의 단순한 집합(1차+2차+3차산업=6차산업)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들 산업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융합(1차×2차×3차산업=6차산업)을 의미한다. 지역에서 3자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농업이나 농촌이 쇠퇴하면, 즉 지역에서 1차산업이 소멸한다고 하면  $0 \times 2 \times 3 = 0$ 이 되어, 6차산업은 성립할 수 없다. 지역에서 농업과 농촌이 활력을 가지고 건전하게 존재해야만 6차산업이 성립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영세한 농업구조를 가진 중국에서도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업의 산업화'라는 노선을 지속하고 있다. '용두기업'이라는 식품가공이나 유통 기업이 다수의 농가와 조직하여, 농가의 농산물 구입을 보증하고 농가는 농산물 수량과 품질을 보증하는 계약거래를 행하고 있다. 용두기업은 농민의 '수직적 통합' 구조이며, '농외'에서 진입한 기업이다. 이 때문에 기업과 농가 간의 이해대립과 농업수입의 농외유실 등으로 농업발전에 한계가 노출되었다. 중국은 농민전업합작사법(農民專業合作社法)을 제정하여 2007년 7월부터 새로운 방식의 농가조직화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의 6차산업화는 '농업내부'에서의 '수평적 통합'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농업 산업화와는 차이가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먼저 전업농 주도에 의한 사례이다. 고찌현(高知縣) 히

가시츠노촌(東津野村)에서는 쌀, 채소, 축산을 연계, 유기 생산하여 도시주민과 직거래를 실시하고 있다. 저농약 쌀·유기 채소의 직거래, 뽕나무밭 닭 방목, 비육우 방목 등이 중심활동이다. 여기에 목재가공·주택건설을 하는 제3섹터도 설립하는 등 6차산업화로서 지역 전체가 성장하고 있다.

둘째 여성·고령자에 의한 사례이다. 여성이나 고령자는 농업만으로 생계를 꾸려갈 필요성이 낮아서 쉽게 착수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오이타현(大分縣) 구니사키정(國東町)에서는 신선 농산물과 특산물 판매, 농산물가공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주민과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농가 소득향상과 농촌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효과를 얻고 있다. 3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여성 20여 명이 지역 농산물의 직판부서, 향토음식 시식부서, 제분·제면·과자 등 가공부서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직판장의 농산물 판매활동을 계기로 최근 채소 식부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생산 품목도 다양화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례이다. 기후현(岐阜縣) 시라카와촌(白川村)은 지자체 주도로 쌀 대체작물로서 메밀을 장려하고, 직영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메밀 가공품을 제조하고 있다. 메밀꽃 경관과 가공체험 등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특별촌민제도를 도입, 이를 상대로 농산물 택배를 실시하고 있다. 마을별로 차공장을 설치하여 차생산을 확대하고, 목재생산과 주택건설 등 임업부문을 포함한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 성공의 관건은 지역단위의 조직화와 인재 육성

일본의 6차산업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추진주체는 전업농을 비롯한 여성·고령자 등 농업인 조직, 농촌마을, 그리고 지자체, 농협 등이며, '농가단위'보다는 '지역단위'로 소득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지역의 다양한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셋째, 전반적으로 시설은 국가보조 등에 의해 지자체나 농협이 설치하고, 운영은 생산자 조직이 담당하고 있다. 넷째, 농업생산을 기본으로 하면서, 가공, 지역특산물 개발 및 판매, 농촌관광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여 소득증대를 실현하고 있다.

6차산업화란 기업적인 경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소득감소에 대응하여 생산자의 조직화로 고용과 소득을 확보, 생활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추진주체로서의 인재 육성과 지역실정을 감안한 적절한 목표수립이 성공의 관건이다. **R**

## 2월 농정 주요 동향

### 쌀 목표가격 2012년까지 동결

국회 본회의는 2월 19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1월 29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2005년 쌀 목표가격의 적용 기간을 2012년산까지로 연장·고정하고, 목표 가격의 변경단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쌀 주업 농가들의 소득과 순수익이 2004년을 제외하고 2001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곡 80kg당 17만 83원이 2012년까지 유지된다면 소득 안정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목표가격 동결에 따른 추가 재원 부담과 2014년 이후 쌀 관세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목표가격을 동결할 경우 쌀 농가가 받는 충격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향후 쌀 목표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는 DDA 협상 결과와 도입 예정인 농가단위 소득안정지원제도가 있다. 최근 세 부협상 의장 안이 배포된 DDA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보조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2010년과 2011년에 시범 사업을 거친 뒤 2012년 쌀소득보전직불제와 통합 예정인 소득안정지원제도가 시행될 경우 목표가격 설정의 의미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토지이용 규제 완화 전망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월 5일 국정과제 보고에서 「농지 및 산지 등 토지 이용규제 완화」방안을 보고하였다. 이 과제는 국정 과제 지표 중 하나인 '활기찬 시장경제'의 중점 과제로 분류되어 1년 이내에 추진될 예정이다.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경작이 어려운 한계농지의 소유와 거래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한편, 한계 농지 전용 시 절차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간소화된다. 이외에도 수질 오염 가능성이 낮은 일부 농업보호구역의 제한 대상에서 해제, 농업진흥지역 개발 시 해당 면적만큼의 농지를 조성해야 하는 의무 철폐, 농업 법인의 구성 요건을 개선하여 농지 소유 조건 완화, 상속·이농 농지 소유한도 철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산림 중 일부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농지와 산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토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농업인의 재산권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제안에 대해 국제곡물 상승 등의 여건 변화 속에서 식량 자급률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려

면 농지 규모를 유지해야 하고, 규제 완화에 따른 지가 상승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농림부, 농산물 공동마케팅 사업 대상자 선정

농림부는 2월 11일 2008년 농산물 공동마케팅 사업 대상자로 논산수출물류(딸기, 배), 참다래유통사업단(참다래, 고구마), 대관령원협(감자, 배추), 안성맞춤조합공동(신선채소) 등 13개 조직을 선정하였다. 이는 2007년 11월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16개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공개발표, 산지유통지원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 결과이다.

농산물 공동마케팅사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산지유통주체들이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공동마케팅, 브랜드화를 실시할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들 산지유통업체가 공동마케팅을 하면 출하선도금, 원료 구입 및 계약재배 계약금, 매취사업자금, 무이자인센티브(30억 원 이내)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150억 원 내에서 운영자금(융자 80%)도 지원한다. 2008년 사업부터는 이전과 다르게 생산자조직을 세 등급으로 평가하여 인센티브 자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하였다.

2005년 9개 조직을 대상으로 시작된 공동마케팅 사업은 2006년 6개, 2007년 4개를 지정하는 등 올해까지 총 32개 조직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농림부는 2017년까지 지원 대상 조직을 100개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 DDA 농업협상 개정안 발표

2월 9일 WTO 농업협상분과 팔코너 의장은 협상 세부원칙 개정안을 배포하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관세 및 국내보조 감축 이행기간, 특별품목 허용 조건 및 개수 등 협상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였고, 열대작물에 대한 추가 관세감축 제시 등 새로운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었다.

특별품목 조항은 개도국에 한하여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 개발의 필요를 감안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세 양허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확보 여부가 지니는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열대작물 목록에 포함된 품목은 민감품목 대상에서 제외되고 모든 선진국은 4년에 걸쳐 관세를 균등 감축하도록 제안한 부분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열대작물은 쌀과 고추류이다. (자료 정리: 동향분석실)

#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우리 연구원이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 1월 한달간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연구원 현지통신원) 8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새정부 농업정책에 대해 농업인은 '소득안정'을 도시민은 '경쟁력 강화'를 주문하였다.

## 농정공약 중 '소득보전 특별법' 기대 높아

조사에 따르면 농업인 73.6%는 새정부의 농정공약이 잘 지켜질 것으로 기대했으며, 농정공약 중에서는 '농어민소득보전특별법 제정', '농가부채 동결법 제정', '농지거래 규제 완화' 순으로 선호해 소득보장 관련 공약에 큰 관심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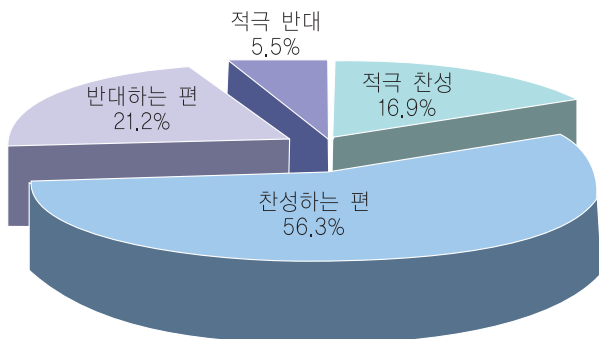
농업인들은 새정부 최우선 농업현안 과제로 '개방에 따른 농업피해 대책 마련' (47.4%) '소득안정 대책' (17.4%), '도시와 농촌 양극화 해소방안 제시' (15.0%) 순으로 꼽았다.

농업인은 투융자사업이 '직불제' (29.3%) '농촌 지역개발' (13.7%), '농외소득원 확충' (13.5%)에 투자가 확대되기를 주문한 반면, 도시민들은 농업예산이 '농업의 경쟁력 강화' (33.7%), '식량자급률 향상' (21.9%), '식품의 안전성 확보' (19.1%)에 투자되기를 바랐다.

## 농지거래규제 완화 '찬성' 우세 속 '신중론'도

농지거래규제 완화 공약에 대해서는 도시민 73.2%, 농업인 68.5%가 찬성했으나, 도시민 26.7%, 농업인 25.8%가 반대하는 등 국민 4명 중 1명은 신중한 접근을 바라고 있다.

도시민이 우려하는 농업·농촌 문제로 57.9%가 '농촌인구 노령화로 인한 시골의 공동화'를 가장 많이 꼽은 것을 비롯해 '식량공급 차질', '환경파괴', '농산물 안전 문제'를 우려했다.



〈농지거래 규제완화에 대한 견해(도시민)〉

## 도시민 74.6% '미국산 쇠고기 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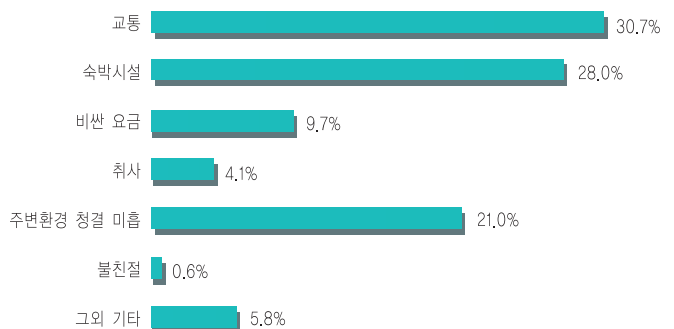
한·미 FTA 비준에 대해 도시민과 농업인은 '원안대로 국회 비준 노력' 각 36.5%, 26.6%, '비준 원점에서 재검토' 각 31.9%, 42.6%, '국민투표로 결정' 각 31.6%, 24.2%로 농업인들은 비준 반대 의견이 우세했으나, 도시민들은 시각차이를 보였다.

도시민은 농산물 구입조건 우선순위를 안전성-품질(맛)-생산지(국산/외국산) 순으로 선택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74.6%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농산물이 외국농산물에 비해 안전하다'는 주장에 도시민 86.5%가 동의하여 국산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 도시민 85.8% '농업, 국가경제에서 중요'

도시민의 85.8%가 농업이 여전히 국가경제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나, 농업·농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한 세금 추가부담에는 39.1%만 찬성하여 전년보다 13.7%p 감소했다.

향후 가장 해보고 싶은 농촌관련 활동으로는 '주말농장' (32.5%), '전통테마마을 체험' (21.7%), '농촌 일손돕기 등 봉사활동' (21.3%) 순으로 나타났다. '감자캐기 등 농사체험' (8.9%)까지 고려할 경우 농촌에서 '직접 생산' 하는 활동에 높은 관심을 (62.7%) 보였다.



〈농촌관광 시 불편 사항〉

농촌관광을 경험한 도시민 중 절반 정도만(45.9%) 농촌관광에 '만족했다'고 응답하였다. 불만족 요인으로 나타난 교통, 숙박, 청결 등 농촌관광 인프라 지원을 강화해 도시민의 관광수요를 농촌지역으로 유인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김동원 부연구위원, 박혜진 연구원〉

## 캄보디아 농촌개발 관련 워크숍을 프놈펜에서 개최



'캄보디아 농촌개발 정책과 전략수립'이란 주제로 2월 20일 프놈펜호텔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연구원이 수행 중인 캄보디아 농촌개발 정책과 전략수립(연구책임 김용택 선임연구위원) 과제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농촌개발정책을 검토하는 워크숍이 2월 20일 캄보디아 프놈펜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캄보디아 농촌개발부의 차관, 차관보를 비롯하여 농촌개발 관련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캄보디아 한국 국제협력단(KOICA)지소장, 국제기구 및 국제비정부기구(NGO) 등 총 150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연구원에서는 정기환 초빙연구위원이 농촌 지역사회개발 분야, 김용택 선임연구위원이 농촌경제 분야, 허장 연구위원이 농촌사회분야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다. 주요발표 내용은 분야별 캄보디아의 농촌개발정책의 실태,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 실현가능한 정책 프로그램 제시 등이었다.

워크숍에서 발표된 내용은 캄보디아 농촌개발부,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이 과제의 중간보고서는 2008년 8월, 최종보고서는 2009년 7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 개소 7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우리 연구원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는 2월 27일 개소 7주년을 맞아 대회의실에서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회식에서 김정호 부원장은 개소 7주년을 축하하며 벤처농기업 보육을 위해 수고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농림부 이호재 사무관이 '농림부 2008 농업벤처

창업보육센터 운영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박동희 사무관이 중소기업청 2008년 입주와 졸업업체 지원사업에 대해 밝혔다.

최지현 선임연구위원은 '여건변화에 따른 식품정책 추진 방향'이란 제목으로 발표하고, 졸업업체인 한국인칼균연구소 정재환 대표가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유망입주업체인 도올 F&B 강덕원 대

표가 운영사례를 발표했고, 세원경영연구소 이선호 이사는 벤처기업 경영진단 요령에 대해 설명했다.

7년 동안 연구원 부설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는 15개의 업체를 졸업시켰으며, 현재 9개 업체가 입주하여 보육을 받고 있다.

### ▣ 연구원 인사

△〈보직〉 농촌발전연구센터장 이동필, 국제농업연구센터장 어명근

△〈임용〉 전문연구위원 김광선, 채광석, 한재환, 초청연구위원 권인혜, 김동훈, 윤형현, 승준호

### ▣ 연구진 동정

△김창길 연구위원은 2월 19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08 경제학공동국제학술대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농업부문 영향과 대응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박동규 선임연구위원은 2008 미국농업전망대회 참석차 2월 20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4일 귀국했다.

## 부서별 2008 업무계획 보고회



2008년 업무계획 보고회를 열어 효율적인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올해 부서별로 추진할 업무계획 보고회를 2월 18일과 19일 대회의실 가졌다. 부설기관인 농림기술관리센터와 농촌정보문화센터는 2월 20일 중회의실에서 보고했다.

업무계획 보고회는 부서별로 올해 추진할 업무를 보고한 뒤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개선방안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도 연구부서는 기본과제를 중심으로 사회·정책적 의제에 대한 연구수요 대응, 대외협력 및 연구네트워크 강화, 국제 세미나 등 주요 행사 계획 등을 보고했

다. 지원부서는 지난해 사업추진에 대해 평가하고 올해 개선할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한 뒤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업무계획 보고회는 2월 18일 행정실 및

감사담당, 자료정보지원실, 농산업경제연구센터, 농업구조·경영연구센터, 19일에는 동향분석실, 산림정책연구실, 농촌발전연구센터, 농업관측정보센터, 국제농업연구센터, 기획조정실, 중국사무소 순으로 진행되었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최정섭 원장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해 맡은 업무를 수행하여 연구원은 물론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길 당부했다.